자전거 주차장 늘리고 등록제로

■ 광주시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시민 자전거' 확대·안전교육장 운영도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등록제, 시민자전거 확대,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시는 3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노외주차장과 다중이용 공공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고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에 대해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요금은 법에 따라 설치됐거나 시비 지원을 받은 주차장은 무료로 하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때는 한 시간당 200원, 하루 주차권은 1천원, 월 정기권은 1만5천원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의 도난과 장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할 구청에 자전거의 차대번호를 등록하면 스티커를 발급해 분실 또는 매매때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등록 시민에게는 자전거 주차장 우선 사용권과 함께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주도록 했다.

또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조례안은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담고 있다.

시는 특히 내년에 2천대의 '시민자전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5개 구청과 도시철도공사 등이 660대의 무료 대여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이같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시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이미지에 걸맞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GPS 자동 배차…운전자 실명제…요금은 신용카드로

30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린 광주 '나이스콜' 택시 발대식에서 박광태 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이 500여명의 운전자들로 구성된 '빛고을 홍보단'과 함께 시민 만족서비스를 다짐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광주 '브랜드 택시' 출발

서비스 획기적 개선…'나이스콜' 500대 발대식

광주에도 '브랜드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광주시는 30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박광태 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 택시운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나이스콜' 택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운행을 시작한 브랜드 택시는 개인택시 500대로 광주시가 장비구축비의 70%를, 나머지는 개인택시조합이 지원했다.

다음달 말께는 법인택시 500대도 별도의 브랜드를 정해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브랜드 택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승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자동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특히 택시요금을 낼 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11월 중순부터 가능)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브랜드 택시는 택시업계에 콜 고객 유치를 통한 수익증대를, 운전자에게는 근무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랜드 택시 요금은 일반 중형 택시와 같으며, 콜 번호는 1577-3800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브랜드 택시 운전자들은 '빛고을 홍보단'을 발족, 시민 만족 서비스를 실천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朴 시장, 해외 연수·배낭여행 금지령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박광태 광주시장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리는 한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30일 간부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광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해 시민들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더 느끼게 된다"면서 "경제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연말에 각 산단 제조업체를 비롯 서비스 업체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었다. 박 시장은 "경기는 심리적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시장개척이나 해외투자유치 등 경제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출장외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하기 바란다"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투자기관까지 직원들의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로연수 등 위로성격의 해외여행은 일체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또 "2013국제환경엑스포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다음달 1일 시청에서 열리는 '제43회 시민의 날' 행사를 일체의 부대행사 없이 기념식만으로 치르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시너 등 인화물질 판매 규제해야"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

순식간에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방화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너 등 인화물질 판매를 규제하고 문화재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7회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에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김경환 소방위는 '목조 문화재 화재 특성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소방위의 논문에 따르면 숭례문 방화사건을 재연한 실험 결과 화재 원인은 방화에 사용된 시너가 '열기둥'을 생성시켰고, 고온의 열기둥이 낡은 목조건물 천장으로 옮겨 붙었다.

이에 따라 방화범 채모(70)씨가 방화를 하는 데 사용한 시너 등 인화물질의 유통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길만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너는 페인트 판매점 등 전국 2천300여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이 없어서 방화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의 주요 화재 사례가 소개됐으며, 최우수 논문에는 김 소방위의 논문이, 우수논문은 경남, 충북, 전북, 울산소방본부의 논문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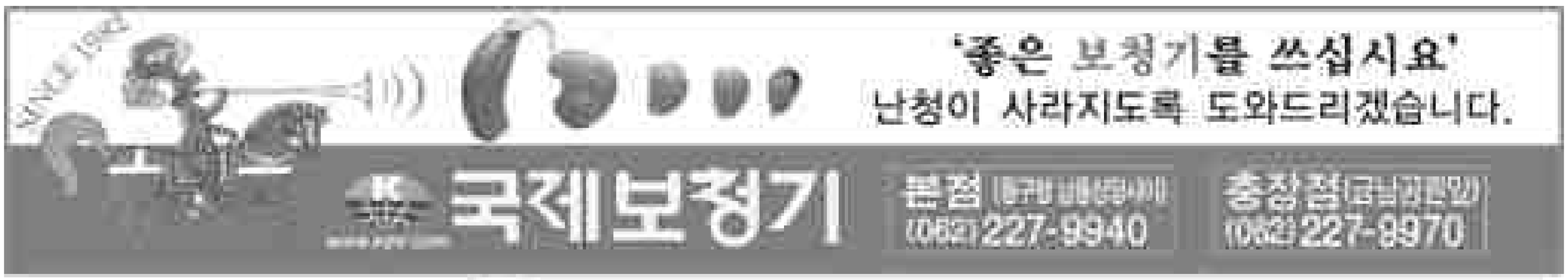
최정주 광주시소방본부장은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를 화재조사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내일부터 '토요 버스 전용차로제' 폐지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일에만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30일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교통량이 감소함에 따라 토요일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버스전용차로에도 승용차 등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광주지역 버스전용차로는 대남로(농성광장↔남광주4거리), 서문로(광주대입구↔백운광장), 필문로(서방4거리↔조대앞4거리) 등 8개 노선 47.2㎞ 구간이다.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